

---

# 특집

---

## 민주화운동 단체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정치조직 논쟁

—반제 통일전선 전통의 복원과 정치세력화의 지체

이창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선거투쟁과 정치세력화

—투쟁노선의 분화를 중심으로

김영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과 운동전략 비교

—양대 노총의 제도적 매개역할(1997~2005)을 중심으로

최인미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정치조직 논쟁

반제 통일전선 전통의 복원과 정치세력화의 지체

이창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 〈논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민족해방운동 계열의 반제통일전선에 기초한 민주대연합 전략의 발생 배경과 역사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정치조직 건설 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통일전선 전략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족해방계열의 전략으로 부상하여 현재까지 중심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통일전선 전략은 외국의 현실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전략의 토착화를 향한 민족해방운동 계열의 이론 및 현실 투쟁의 산물로 등장했다. 1991년 건설되어 2008년 해체된 전국연합은 이러한 통일전선 건설 투쟁의 산물이자 추동엔진으로, 우리는 전국연합을 통해 개별 대중운동과 구별되는 한국 통일전선운동의 구조와 그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의 원리에 대한 동의와 그 실현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통일전선 전략의 실현을 위한 다원적 경합공간이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치정당과 통일전선의 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경합공간이 구축되었는데, 이 과정은 ①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서 이루어진 진보정당운동과 민족해방계열의 결합, ②현 단계 민주대연합과 독자적 정치세력화 사이

에 존재하는 진보정치운동 내부의 갈등과 균열에 대한 이해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전국연합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서 ①내부적으로는 정치연합의 성격이 사실상 해체되어 단일 정파의 외곽조직의 성격이 강화되고, ②정당체계 외부의 통일전선운동이 직면한 정치적 한계로 인해 주변화되어 사실상 해소되지만, 민족해방계열의 통일전선 전략은 변화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변형을 통해 정당연합 기반의 민주대연합 전략으로 유지-존속되고 있다.

■ **주요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통일전선, 급진화, 민족주의, 집합적 정체성

## 1. 들어가며

1980년 광주항쟁 이후 비판적 자의식이 충만했던 한국 지식인과 대학생에게 급진적 계급·민족 지향적 해석 틀이 확산·수용된다. 운동이 더욱 급진화되는 1980년대 초기에는 정치주의,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강조하는 경향 즉, 전위와 노동계급과 학생운동의 선도적 투쟁을 강조하는 운동 전략을 구사하는 ‘비제도적 운동정치’로 틀 확장(frame extension)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노선논쟁과 실천의 과정에서 구성된 ‘민족’과 ‘계급’이라는 해석 틀의 재구성(reframe)과 분쟁(frame disputes) 또한 심화된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PD(민중)와 NL(민족)적 경향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해석 틀은 사건이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게 하며, 운동조직의 이념과 전략 등과 일치하고 상호보완적일 수 있도록 운동의 해석적 지향을 연결짓는다. 단적으로 반제통일전선론에 기초한 ‘민주대연합론(NL)’과 ‘의회주의’ 및 변혁 노선에 기초한 독자정당건설론(PD)은 1980년대 이후 집합행동의 레퍼토리(repertoires of collective action)로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수용된 해석 틀과 운동전략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조직문화의 변화 없이 쉽게 전환되지 않는다. 운동 목표, 수단 및 환경에 관한 인식적 정의(cognitive definition)라고 정의되는 해석 틀은 운동 언어, 의례 및 관행과 행위자 간의 능동적 관계망으로서의 조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통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이념(혹은 해석 틀)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sup>

본 논문에서는 급진적 해석 틀의 등장과 두 해석 틀의 분쟁과정에서 NL적 해석 틀(반제통일전선론)이 운동사회에 확산되었던 과정을 추적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분쟁하는 두 개의 해석 틀 가운데 민족해방과의 통일전선 전략이 갖는 합리적 동기에 주목한다. 민족과 계급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변동의 담론(rhetoric of change)’의 경합과 각축은 주로 현상의 부당함과 심각함을 주장하는 ‘긴급성(urgency)’의 요소와 행동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행동성(agency)’의 요소, 그리고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공 가능성(possibility)’의 요소 등으로

---

1)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논의들은 인지 문화적 요소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민주화를 설명하는 게임이론, 권위주의의 쇠퇴와 민주화를 촉진시킨 사회운동의 역할을 설명하는 사회운동론적 접근, 기존 체제에 대한 계급의 불만과 이반을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 급속한 사회변동이 운동의 기본 조건이라는 근대화이론은 특정한 가치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집합적 신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과 도전을 동기화시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사회운동은 단순히 객관적 구조나 자원, 제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참여자 자신이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닌 행위자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즉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했을 때 비로소 사회적 실재를 해석하고 실천(Melucci 1999, 92; 임희섭 2001, 165; 이창언 2009)하는 것이다.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통일전선 전략은 ‘성공가능성의 요소’를 통해 정당성을 확대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통일전선과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변동의 담론’이 각축을 벌이는 과정을 검토하면 민족해방(NL)계열은 기존의 가치관과 관행으로서의 사회적 정신 내지 사회의식(societal mentality)에 근거해 ‘저항행동의 틀’을 구성하는 한편 정체성 지향적 전략(identity-oriented strategy)을 구사하는 과정을 통해 운동사회의 동의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전선론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정체성과 대중적 저항의 의미를 저변에 깔린 집단적 기억과 그 해석 틀이 어떤 문화적 실천을 가능케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통일전선론과 합법정당 논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민족해방계열 내부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하는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를 연구의 주요 시기로 설정한다. 본 논문은 통일전선 논쟁사의 연속적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연합전선적 통일전선체를 지향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등장과 해소과정에서 나타난 내적 긴장과 갈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NL이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결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통일전선론의 확산<sup>2)</sup>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차원에서 어떠한 결과(공정적 부정적)를 낳았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적 현상인 통일전선론은 기존의 ‘사회적 정신’과 근접함으로써 운동의 주류를 확보했지만, 1980년대 저항대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민주적 지배’ 혹은 ‘정상적인 지배’의 출현과 함께 새롭게 재구성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통일전선론 확산의 다차원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지면 관계상 본문에서 간단히 다루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지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반제통일전선론 등장과 확산

### 1) 통일전선론 등장의 사회운동론적 의미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연합전선적 통일전선체로 자임해 온 전국연합의 출범부터 해소(1991/12~2008/02)까지를 검토하면 항상 특정한 노선과 정파의 주도성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적 긴장과 갈등은 전국연합이 자임한 민족민주운동의 구심과 정치적 대표체라는 두 개의 위상이 갖는 모순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전국연합의 활동 과정에서 긴장과 분화는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통일전선론의 등장배경, 통일전선과 합법 정당에 대한 각 정파 간 시각 차이 및 논쟁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항쟁 이후 저항의 선택지가 명확해지는 가운데 1983년 말 유화국면을 거치면서 학생운동과 급진적 지식인의 직접적인 현장 이전을 통한 노화연대가 시도된다. 이 시기 ‘현장 투신’ 내지 ‘존재 이전(지식인의 노동자화)’이 활성화되는 한편 1980년대 중후반 NL의 등장과 함께 통일전선론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통일전선론이 한국사회운동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음은 첫째, ‘이념과 가치 차원’에서 운동사회의 급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운동의 ‘급진화(radicalization)’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틀(frame)의 변화 즉, 자신의 삶의 공간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치시키고, 지각하고, 구별하며, 이름 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 틀’이 더욱 급진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해석 틀의 급진적 변화(이념의 급진화)는 운동 방식의 급진화를 낳는다(이창언 2009).

통일전선론의 수용은 곧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대 수준에 머물던 민주화운동 프레임을 넘어 변혁과 권력의 전략이 운동권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통일전선의 문제의식은 국제적·국내적 제 조건 및 계급적 제 관계 등 유물론적 기초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주요한 모순, 주적, 지도와 동맹 등의 구조를 갖는 내부의 계급적 대항을 파악하고 주요 측면의 전환을 실천적·목적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sup>3)</sup> 통일전선론의 확산이 급진화를 설명하는 증거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타도와 고립의 대상과 운동 동력의 재설정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북에 대한 인식 상의 변화를 수반했기 때문이다. 당대 운동가들은 광주를 혁명의 표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여기에 ‘희생자 담론’과 ‘부채 담론’을 접합하여 경계와 전략을 재구성한다.

급진적민족해방론을 수용한 이론가들은 미국이 광주학살을 방조하고 군사독재를 지원한 행위로 불거진 자생적 반미의식에 식민의 기억을 접합하고, 식민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세습적 희생자’ 의식을 매개로 민족경계를 재구성한다. 반미주의 확산은 군부와 외세가 적이 되고 북한이 민족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민족의 적에서 통일 대상, 나아가서는 주체조국으로 그 의미가 재구성되었다. 우리사회 모순이 외세와 분단으로부터 기인한다는 해석 틀의 수용은 식민과 독재의 이분법적 구도, 강한 민족·애국주의적 실천을 낳았다.

한국전쟁 이후 운동진영 내부에 상존하던 변혁운동의 단절(복원)론적 해석보다 ‘연속론적 해석’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반제통일전선론의 확산이 미친 사회운동의 문화적 결과(cultural consequence)라 할 수 있다. 절대역량 단절(복원)론은 광주항쟁 이후 급진적 학생운동이 이전의 급진

3) 통일전선(united front)이란 ‘변혁운동에 이해를 가지는 복수의 계급·계층·정당·사회단체, 개별적인 인사들이 계급적 이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 공동의 대상에 투쟁할 목적으로 만든 공동전선(공동투쟁의 형태·조직)을 말한다(田富久治 1987, 282). 따라서 사회구성체의 성격과 모순을 밝힘으로써 객관적 조건을 분명히 하고, 피아(彼我)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통일전선의 주관적 조건을 밝혀, 통일전선의 대상과 동력을 설정하고, 통일전선의 동력에 있어서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위상과 역할을 정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적 운동(사회주의운동)의 단절을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급진성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1980년대를 ‘급진적 운동의 부활 시기’로 상정한다. 대체로 PD적 시각은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폐허 속에서 1980년 광주를 거치며 급진화가 새롭게 모색되었다고 보는 데 반해, NL은 통일혁명당(통혁당) 등 지하당의 보존된 역량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며 운동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변혁운동사에서 80년대는 운동의 대중적 발전과 전위조직 자체의 발전, 그리고 이 양자의 결합이 높아가면서 혁명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역량의 축적, 양성 과업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 운동사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중심으로 본다면 전위조직의 전화가 이루어진 1985년을 경계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통혁당의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으로의 전화가 전위조직의 명칭, 개칭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 및 정치정세의 변화 등 시국전반의 변화 그리고 대중의 사상의식과 대중역량의 발전 및 높아진 요구, 여기에 지도역량 자체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한민전이 주장하는 데 근거한다. 결국, 해방 후 지난한 준비기를 경과하고 있는 남한사회변혁운동은 1969년 통혁당의 결성으로 하나의 커다란 맥이 형성되고 다시 1985년을 경계로 변혁운동사의 새로운 단계가 열리는 것이며, 그 사이에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운동의 질적 발전을 예고하는 분기점이라고 보인다(이주현 1991).

NL과 PD 일각에서 일고 있는 연속론(NL)과 단절론(PD)이 제기한 이러한 주장은 단절된 혁명전통, 정확히는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조선)의 민족해방운동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싼 대립적 시각을 내포한다. 치열한 고난을 이겨낸 노력으로 끊어진 혁명 전통의 줄기를 되찾았다고 보는 견해(NL적 시각)와 1980년대의 변혁투쟁은 그 이전 어느 시대

〈표 1〉 단절론과 연속론

분류	주장
절대적 역량 단절론적 해석	노동운동 집중론적 해석 / 재출발론적 해석. 한국전쟁 이후 좌익운동의 인적·전략전술적 단절. 1980년대 자본주의 발전의 심화와 노동계급의 성장, 경제주의에 대한 각성과 정치주의·전위주의·혁명주의 등장.
연속론적 해석	1960년대 이후 남한운동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 온 NL론이 1980년대 중반에 공개적으로 재등장하여 주류화됨.

\* 출처: 이창언(2009)

의 투쟁경험과도 완전히 무관하고 새롭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임을 주장하는 견해(PD적 시각)는 한국사회 성격규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북한과 북한정권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상이함을 반영한다(이창언 2009).<sup>4)</sup>

통일전선론의 등장과 확산은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볼 때, 반합법·비합법 정치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합법·비합법 대중조직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84년을 전후하여 국민운동 방식을 지양, 변혁적 대중노선 아래 조직단위 가입과 민중 주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민중민주협의회’와 상층 명망가형 조직인 ‘민주통일국민회의’가 통합 논의를 거쳐 1985년 3월 마침내 ‘민주통일민중연합(이하 민통련)’이 결성된다. 민통련은 1970년대식 상층 명망성과 1980년대식 하층 대중성을 결합시킨 것으로 반파쇼연합전선에서 상실적 통일전선조직으로 나아가는

4) 단절론이 1980년대 급진화된 운동의 패턴을 설명해 주지만,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차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보인다면, 연속론적 시각은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과정으로부터 초래된 구조적 모순성과 민주화운동 내지 변혁운동의 이념적 고유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이행, 공고화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했는지를 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 단절론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급진적인 사회운동의 특수성을, 연속론은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이창언 2009).

맹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1970년대 비합법 정치조직은 전선을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체’와 ‘전략적 통일전선체의 건설’로 바라보았지만, 민주화운동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CNP논쟁을 거치면서 연합해야 할 대상(동력)과 타도 대상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급진적 운동이 제도야당으로부터 명백히 분화되고 독자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된 전환점은 1986년의 5·3인천투쟁이었다(성공회대 출판부 2000, 100). 5·3인천투쟁 이후 전선 논의는 개념·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의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된다. 전자가 개념 논의, 사회성격과 계급 배치에 기초한 전선 유형 논의 등이었다면, 후자는 전술 운용 논의, 지도부 구성, 가입 범위, 연대운동의 수준, 조직 체계 등에 주목한 통일전선체 결성 관련 논의(정해구 1988; 채만수·김장환 편 1990; 허성혁 1998; 일송정 편집부 1990; 김운영 1987; 김찬 1989; 은수미 2004, 323 재인용) 등으로 대별된다.

셋째, 행위 양식과 운동 전략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통일전선적 혁명론’과 ‘소비에트 혁명론’은 체제의 통제와 관련된 갈등에서 도구적 행위논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통일전선적 혁명론은 생활세계의 양식과 관련된 표출적 행위논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두 개의 노선이 공히 권력 지향적 전략(power-oriented strategy)을 내포하고 있으나, 통일전선적 혁명론은 기존의 가치관과 관행으로써 ‘사회적 정신’ 내지 ‘사회의식(societal mentality)’에 근거해서 ‘저항행동의 틀’을 구성하는 한편 정체성 지향적 전략(identity-oriented strategy)을 구사<sup>5)</sup>함으로써 전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전선론은 혁명을 단순히 혁명적 지향을 갖는 제 계급과 제 세력의 동맹이라는 모델로 사고하던 저항주체론의 변화를 의미한다. 통일전선론이 정식화됨에 따라 여타 계급 계층이나 세력

---

5) 사회운동이 권력의 문제나 정체성의 문제 중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운동의 특성이나 운동 시기 그리고 운동의 경향성에 따라 어느 한 측면이 강조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논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전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의 연합 문제는 단순히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조희연 2004, 40-44)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의 ‘노학연대’가 ‘계급 중심성’의 문제를 강조했다면, 통일전선론은 어떤 목표를 갖고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급진적민족주의자에게 통일전선론은 볼셰비키 혁명론의 급진적 변용과 확장, 즉 ‘전략의 한국화’ 차원에서 이해되었으며 러시아적 현실로 환원되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의 저항성과 역동성을 저항담론이 담아내야 하는 방법론으로 수용되었다.

1980년대 대중운동의 활성화가 통일전선론의 당위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통일전선론의 확산이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통일전선론의 수용과 대중운동의 확산은 상호 보완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표 2〉 소비에트 혁명론과 통일전선적 혁명론의 대비

	소비에트 혁명론	통일전선적 혁명론
계급배치	소부르주아 적극 배제	소부르주아 포함한 통일전선 형성
투쟁전술	기회주의와의 볼셰비키적 투쟁	일면투쟁·일면타협
권력기관	봉기기관으로서의 소비에트	통일전선체
혁명의 단계성	이중권력 창출	2단계 행정
주요투쟁무대	공장	가두
권력의 성격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인민민주독재 →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 출처: 문영호(1989, 34; 이창언 2009; 2001 재인용)

## 2) 통일전선과 독자적 정치세력화 논쟁: 합법정당 대체론, 민중통일전선 강화론, 민주대연합론

1980년대에 본격화된 통일전선 논의는 반미구국통일전선론 대 반제·반예속파쇼 민중전선론, 반제·반파쇼 민중전선·민주전선론, 혁명적 민주주의진영론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통일전선의 성격과 형태에 규정력을 미친 두 가지 요소는 식민지 종속국과 제국주의적 규정에 대한 문제와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및 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야당과의 연합문제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성격 및 계급 배치 논쟁과 곧바로 연결되어 민족자본가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것은 시민운동의 등장과 더불어 그 구도가 약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전선 논쟁의 특징은 최근까지 반복되는 민중연합-민주연합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전선(민중통일전선론)과 두 개의 전선 논쟁(민주연합전선론), 독자 후보와 비판적 지지,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주대연합 등 그 명칭은 다르나 지향하는 바는 유사하다.

1990년대 초반 조직 노선상에서 핵심으로 대두되는 것은 자주적 대중조직의 강화와 동시에 정치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강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민족민주운동진영에서는 대중조직과 독립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대중조직을 강화하는 데에 유력한 조직체로서 여러 가지가 검토되었다. 정치적 대중조직, 전선조직, 합법정당, 비합법 전위조직 등이 그러하다(최동규 1992, 41). 정치조직의 상과 건설 경로에 대한 인식차이는 합법정당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차이가 외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1989/01/21~1991/12) 내부의 합법정당 논쟁이었다. 이는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통련의 ‘비판적 지지’를 둘러싼 갈등이 민중정당건설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매개로 다시 재점화된 것이었다.<sup>6)</sup> “그 결과 1989년 9월 26일 ‘전국민족민주연합(이하 전민련)’ 제2차 중앙위는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전민련 내의 임원은 그 직을

사임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결의될 정도로 문제가 불거져 대립이 심각해진다. 전민련 내부에서 합법정당 반대론을 대변하는 민족민주운동연구소(1988/11/15)는 “운동권 내부, 정확하게는 전민련 내부의 대립하는 두 조류가 서로 분립과 경쟁을 선언한 것이고, 각자 자기 노선의 올바름을 실천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의의 표현”으로 이 날의 결정사항을 설명한다. 이는 합법정당 결성과 관련한 전민련 내부 논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론’과 ‘민중정당 건설론’의 대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내부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민련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봉합이 아니라, ‘정당결성 불가방침’을 내림으로써 전민련은 급속하게 조직 분화 과정을 겪는다. 1989년 11월 10일 전민련 1차 탈퇴파가 구성한 ‘새 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와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이 통합하여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이 결성된다. 그 후 전민련은 연합적인 공개지도력이라는 의미와 자주민주통일투쟁에 참여한 제 세력의 공동투쟁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본격화된 논쟁과 분화과정을 거치면서 투쟁과 조직노선의 갈등으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김창우 1992, 165-166).<sup>7)</sup>

6) ‘견해 I’로 불리는 「전민련과 합법정치전술」이라는 문건에서 최초로 제안된 반대 진영의 논리는 정당 건설의 시기, 경로, 의회 및 선거 공간 활용, 정세, 주체역량, 합법정당 내부의 불일치, 전민련과 합법정당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민련의 조직적 강화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내부에 정치위원회를 두어 ‘선택적 후보전술’을 중심으로 하는 합법정치전술을 구사할 것을 제안했다(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89, 182-188; 이광일 2007 재인용). 이에 대해 옹호세력은 ‘견해 II’로도 불리는 「현재의 정치정세와 새로운 합법정당 결성의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통해 김대중, 김영삼을 포함한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이들의 계급적 한계, 기존 지역당 구조의 극복, 새로운 대체세력에 대한 대중의 요구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진보정당건설 필요성을 주장했다(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89, 190-198; 이광일 2007 재인용).

7) 전민련의 조직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상설공투체’로 보는 입장, ‘낮은 수준의 통일전선체’로 보는 입장 등이 존재했다. 물론 이러한 이견은 전민련 결성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상설공투체로의 위상 설정이 해소됨으로써 커다란 논쟁이 되지는 않았으며 전민련의 역할에 대한 기대

1980~90년대 초반 민족민주진영 내에는 통일전선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같이 합법정당 결성에 대한 심각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합법정당 창당에 적극적이고 그것의 의미를 지도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입장이 있다.

20세기 러시아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했고, 민중의 정치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사상의 통합성이 높아지고 지배체제가 고도화되었으므로 대중정당이 필요하며 그것은 합법적 지위를 갖고 활용하여야 한다(장기표 1990).

지하정당은 사노맹의 활동에서 보이듯이 존립 자체가 어렵고, 활동의 의의도 크지 않다. (따라서) 국민대중 속에서 사랑받는 조직으로 당을 건설해야 한다. 당은 반합법, 비합법 운동의 지도기관이 아니고 민중권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자리매김이란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김문수 1991).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합법주의를 강조한 민중당의 지도부는 비합법 전위정당뿐만 아니라 ‘반합법 전선체 조직(통일전선 조직)’에게 비판적인 동시에 보수야당의 불철저성과 민중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통일전선론은 파시즘의 대두와 자본주의 발전이 미흡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정착될 수 있으나 한국은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이며,

---

를 반영하여 ‘낮은 수준의 통일전선체’라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988, 203-205). 전민련은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의 상설연합조직이자 민족민주변혁의 정치적 구심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설정했지만,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조국통일촉진투쟁의 강화로 지배세력의 강경탄압을 초래하게 되자 투쟁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여기에 전민련 내에서 합법정당추진 움직임까지 일어나 투쟁노선의 갈등만이 아니라, 조직노선에 대한 갈등마저 폭발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일(2007)의 글을 참고하라.

계급적 억압을 위한 국가보안법의 온존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내부 자유의 확대를 특징되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파시즘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국가로 설명한다. 따라서 비합법 전선체에 대한 신비화된 이론을 버려야 한다(이원주 1991).

민중당과 달리 ‘시기상조론’은 민족민주운동의 합법당은 대체세력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은 지도역량과 대중역량 강화의 한 측면임을 강조한다. 합법정당추진세력의 문제는 대중역량에 대한 과도한 평가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도역량의 과신과 지도역량 내부에 존재하는 세력 간의 알력과 갈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분단 하 외세지배 사회에서 합법정당 건설은 현행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에 위반하지 않고 정당을 만든다는 뜻으로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인 합법정당의 건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당을 만드는 힘든 노력을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 그리고 전 국민적인 민주항쟁으로 통일적으로 집중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민주항쟁이 승리한 이후 합법적인 혁신정당이 건설되도록 추진해야 한다(장명국 1992, 164-165)”는 것이다.

합법정당 반대론 중 원칙적으로 합법정당건설에는 찬성하나 현재 그에 걸맞은 여건과 역량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합법전술은 필요하나 합법정당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즉, 전위정당의 지도로 전개되는 비타협적인 변혁운동이 합법정당 때문에 개량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합법정당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법정당의 이념과 지향, 변혁운동 상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는 전위정당노선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은 스스로 전위정당 노선을 폐기

하기 전까지 진보적 이념정당이 남한 사회주의 운동의 전략적 과제를 담당할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두 개의 전선론과 통일전선 유보 경향으로서 양날개론과 민중정당 대체론을 비판한다. ‘국본강화론·비판적 지지론·평민당참여론’과 같이 민족민주 운동진영에서 최악인 개량주의적 노선에 그 뿌리를 두고 발전한 ‘민주대연합론’은 민중통일전선 결성 자체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주도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중통일전선 결성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민중정당 대체론은 “특별한 형태, 반합법적 형태의 통전체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며 합법정당·민중정당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의회주의적이고 합법주의적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전민련 결성을 둘러싸고 ‘두 개의 전선론’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합법정당을 둘러싼 기회주의적 주장인 ‘민주연합당론’을 통해 해악적 경향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가지는 오류는 우선, “야당정치 세력으로 대표되는 중간계층의 상층과 연합하고 그들을 투쟁 속에서 견인하는 것은 현재 통일전선운동의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에서 보여지듯이 연합대상을 판단하는 계급적 관점의 상실과 현 시기 민중통일전선 결성의 핵심과제에 대한 방기에 있다. 이 중 전자는 보수야당의 물질 토대인 중소기업자를 견인해야 한다는 ‘중간층 견인론’으로 유포되어 왔다. …… 다음으로 민중통일전선 결성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개량주의적 경향은 기존 ‘후보단일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양날개론’과 남한노동해방진영 일부의 동요의 결과 제기된 ‘통일전선의 민중정당으로의 대체론’이다. 이 주장은 민중통일전선 결성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즉각적인 결성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민주주의 변혁투쟁의 중심을 합법민중정당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중통일전선의 결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양날개론이란 “민중통일전선

의 양대 세력 중 하나가 바로 합법민중정당이며 당면시기에는 특별히 이중 합법민중정당 결성에 주력해야 한다”(장기표 1989).

민중회의는 “합법정당이 구심조직을 자임하면 운동은 비타협성을 상실하거나 변질될 수 있고, 비합법정당의 형태도 방어력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합법에 포진하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오세철 1991)”고 주장하지만, 당과 전선체가 분리되지 않는 변증법적 통일체로서의 정치적 구심, 합법정당이 전술적인 정치적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한편, 권력의 문제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양면적(대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한 NL의 반제통일전선론의 특징은 연합과 연대를 중시하면서 민중권력 창출의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합법·비합법 당 조직 중심이 아닌 **전선 중심성(주도성)**을 강조한다. 1987년 이후 통일전선론자들은 현실태로서의 민주대연합(야당과의 연합) 노선을 견지해 왔다. 초기에는 단결을 위한 무기라는 당위론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전민련 출범과 합법정당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통전론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이해 또한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통일전선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도 형성되었는 바, 그것은 민주연합전선체와 민족민주전선의 포괄 범위와 대중조직의 참여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전자가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통일전선’ 간의 관계 문제라면, 후자는 ‘단일전선적 통일전선’과 ‘연합전선적 통일전선’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합법정당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NL 주류의 견해는 정당의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여 그 역량을 바탕으로 상층통전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들은 민족민주운동의 합법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전선적 당, 대중조직의 참여와 지지에 기초한 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NL은 합법정당 추진세력의 주관적 역량에 대한 오관, 고질적인 파벌주

의를 지적하는 한편, 독자성과 연대라는 원칙의 적절한 조절을 강조한다.

합법정당을 둘러싼 대립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건설과정에서도 이어진다. 논란이 일었던 내부 문건 「상설연합체 건설을 위한 안(최종안)」 중 ‘③92, 93년 정치정세 속에서 상설연합은 민주주의의 민주대연합을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투쟁해야 한다’ ‘④상설연합체는 대중정치투쟁을 기본으로 수행하면서 합법적인 정치전술을 결합시킨다’는 조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 있었다. 그리고 상설연합 준비위 6차 대표자회의의 「92-93년 권력재편기에 임하는 우리의 특별결의」 중 ③항이 문제가 되었다. 원안은 다음과 같다.

①전국연합의 조직적 합의와 대중적 역량평가에 기초하여 전국연합의 독자후보와 전술을 구사한다. ②밑으로부터의 후보추대운동과 위로부터의 연합공천 노력을 통해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범민주진영의 단일후보를 적극지지지원하면서 반민자당투쟁을 대중적으로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상조론 측의 문제제기로 “전국연합의 조직적 합의와 대중적 역량평가에 기초하여 전국연합의 후보전술을 구사하되, 밑으로부터의 후보추대운동과 위로부터의 연합공천 노력을 통해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연합은 민주정부가 이루어야 할 과제를 모든 국민 앞에 선포하는 공동강령을 마련하고 공동의 기구를 건설하는 데 노력한다”로 바뀌었다. 이는 원안에 있던 독자후보 전술이 삭제 내지 모호해진 것이다(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2007).

### 3. 전국연합의 출범과 정치조직 논쟁

#### 1) 전국연합의 출범배경과 의의

민중당이 창당되면서부터 경향적 차이에 따라 어느 한 편은 전민련을 공개지도력으로 인정하고, 다른 한 편은 민중당으로 공개지도력을 형성하게 된다. 각계각층의 대중단체는 어느 한 쪽의 지도성을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국민연합 등의 공동투쟁체를 통하여 정치적 대표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창조적 분열이 아니라 지도력의 분열이었고, 공동투쟁체의 와해였다. 전민련의 와해는 운동의 공개지도력을 분산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공동투쟁체의 필요성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국민연합을 비롯한 공동투쟁체가 활성화되었고, 연합연대의 질과 내용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는 1991년 5월투쟁 과정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5월투쟁은 미조직대중이 시위대의 주력이었던 6월투쟁과 비교할 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대중조직의 조직대중이 시위대의 본대를 이루고, 대중조직의 지도부가 투쟁 지도부를 구성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중조직의 진출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1988년 말 이래 민주적 대중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내적 요구는 이미 1990년 초 ‘민자당 일당독재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건설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5월투쟁 과정에서 사안별 공동투쟁체였던 국민연합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더욱 강력하고 상설적인 대중조직의 연대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현 정권의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 공동 투쟁이라는 일반적인 대중의 요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건설에는 시기적으로 특수한 동력이 있었다. 다가오는 네 번의 선

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것이었다.

전국연합은 6월항쟁 이후 성장한 여러 운동 세력과 개인을 망라한 전민련 그리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기층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1989년 1월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 국민연합의 조직적 통합 속에서 출범했다. 1991년 12월 1일 전투경찰의 삼엄한 봉쇄를 뚫고 출범한 전국연합은 광역선거 이후 민족민주운동에 가해진 구속, 수배, 결성대회에 대한 물리적 봉쇄 등 노태우 정권의 집요한 탄압과 운동권 내부의 분열에 대한 자성과 운동진영의 단결 요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전국연합 출범은 1987년 이후 성장해 온 전국적 대중조직을 비롯하여 민족민주세력이 총집결하여 해방 이후 **최대의 연합조직을 결성**했다는 의미 즉,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전선 재편과 조직의 양적 확대라는 외형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 중요한 내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곧 1987년 항쟁 이후 민족민주진영 내부에 존재한 정치, 조직적 견해의 차이와 분열이 권력 재편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적이고 대중적인 실천을 통해 극복해가자는 결의와 단결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전국연합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이전의 민통련이나 전민련을 결성할 때와 달리 대중조직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전국연합의 창립은 1970~80년대 연합전선운동의 맥을 잇는다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국연합은 광주항쟁 이래 독재의 폭압을 뚫고 건설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가 통합하면서 1985년 발족한 민통련과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1989년 전민련을 계승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전국연합은 이전의 전선조직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규모와 이념에 있어서 이전의 연합전선체와 사뭇 달랐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출현한 재야는 제도정치 바깥에 위치하며 극도로 제약된 운동정치의 공간에서 저항활동을 추구했던 민주화운동의 네트워크로서 제도정치로부터의 배제성과 탄압으로부터의 수세적 입장, 소규모 네트워크, 활동의 은밀성 등이 반영되어 있다(조대엽 2005,

〈표 3〉 재야와 전국연합 비교

재야운동	구분	전국연합
제도정치로부터의 배제와 탄압	발생	광우항쟁과 운동의 급진화·대중화
운동역량 보존과 수세적 저항	과제	근본적 대안의 모색
종교계, 학계, 문화계 등 비 제도정치권 인사	주도세력	반정부 운동에서 성장한 학생운동과 자발적인 노동현장 진출자들
소규모 네트워크	조직형태	주요 부문-지역대중조직의 협의체(통일전선체 지향)
활동의 은밀성	운영방식	공개-합법(반합법)

\* 출처: 이창언(2011)

190-191).<sup>8)</sup>

이와 달리 전국연합은 변혁 이념과 대중 기반을 갖는 전선운동의 형태를 갖추었다.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총체성을 강조한 전민련과 기층대중의 힘을 결집한 국민연합의 결합은 기층대중조직이 중심이 되어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결집시키는 연합운동체임과 동시에 민생·민권투쟁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중심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총체성을 담보하는 민족민주운동 투쟁의 구심체<sup>9)</sup>로서 자신의 위상을 설정했다.

8) 재야에 대한 개념과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윤재걸(1985, 164), 백기현(1988, 493), 조희연(1990), 박태균(1993, 169-170), 한국정치학회 편(1995, 458), 윤상철(1997), 최장집(1997), 이정희(1997), 정해구(2001)를 참고하라. 정해구(2001, 57)에 따르면 “재야는 그 어느 단일 계급으로 환원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민주화운동을 위해 하나의 집단으로 결집할 수 있었던 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일종의 ‘피지배 저항 블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동시에 그 운동을 통해 민주화의 제반 가치와 감정 그리고 도덕을 공유할 수 있었던 일종의 ‘헤게모니 블록’이기도 했다.” 재야세력의 민주화운동에 있어 지식인-종교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김동춘(1997, 74-75)의 논의를 보라.

9) 전국연합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 전국연합 강령(2002년 3월 2일 개정)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중심이자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은 각계각층민중들의 총 단결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자주민주통일 실현의 정치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친미예속성을 타파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국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넓은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3.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부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민족자립경제를 수립한다.
4. 사회 발전의 기본 목표인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한다.
5. 민족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족교육을 확립한다.
7. 성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의 원칙을 확립한다.
8. 민족 자주권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9.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10. 자주·평화·중립외교정책을 구현한다.

전국연합 출범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수행한 주요활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생민권 투쟁은 전노협에 대한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파상적 공세에 대한 대응(1991~94), 주거권 실현을 위한 철거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지지 지원,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투쟁(1993),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출범 지원(1994~95),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14개 운동단체와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지역운동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재야 민주화 운동단체가 참가했다(네이버 백과사전).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운동(1994~95),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대위 활동(1996~97),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 및 교육대개혁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민족자주화운동<sup>10)</sup>은 전국연합이 타 단체와 연대하여 꾸준히 전개한 중심 사업 중 하나였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맞서 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배상책임을 묻는 반군국주의 연대사업, 북미 핵 합의와 그 이행을 둘러싸고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운동, 북한동포돕기운동, 주한미군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운동,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등 자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1993년 하반기부터 1994년에 걸쳐 미국의 부당한 수입개방 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응하여 전(全) 국민적 운동으로 ‘WTO 조기비준 반대 및 UR 이행 특별법 제정운동’은 농민생존권뿐만 아니라 민족자주화운동을 대규모의 대중운동 차원으로 상승시킨 운동이었다. 그리고 매년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통일행사 개최를 주도해왔다.

전국연합의 창립은 1992년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최대 관심사인 ‘민자당 심판과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운동진영의 열망과 분리해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결성 직후 재야운동의 대표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총선에 이어 대선투쟁을 준비한다. 출범 직후 맞이한 1992년 총선에서 전국연합은 자체후보 6명을 출마시키고 자체후보 외에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단일후보전술(연합공천)과 민중당 등과의 민중진영 단일 후보단 구성 등의 후보전술을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

10) 민족자주와 통일은 전국연합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조직의 목적임을 보여준다. 전국연합 강령 10개 중 자주와 민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4와 7항이라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26인의 민주인사후보를 지지 지원 후보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조직적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총선에 참여했다. 1995년 지자체 선거<sup>11)</sup>에서는 전국연합 후보 19명 중 12명(당선율 63%,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1명)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한다.<sup>12)</sup>

## 2) 정치세력화 논쟁 I: 정치적 국민운동체

1992년 10월 10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기 2차 대의원대회에서 “전국연합은 자체후보는 내지 않되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독자성 강화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범민주진영의 정치연합’을 통해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이룩한다”는 내용의 제1안을 유효투표자 69%의 찬성으로 대선방침을 결정한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992). 이어 전국연합과 민주당은 양측에서 각 8인씩의 협상대표단을 구성하여 그해 12월 2일 ‘민주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연합·민주당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김대중을 범민주단일후보로 선정하면서 대선에 임한다.

대선 이후, 전국연합을 비롯한 민주대연합노선의 정치적 패배로 전

11) 전국연합의 지자체 선거 대응은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반김영삼·반민자당 민주연합전선을 재복구하고 아울러 민족민주전선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1994년 9월 15일(목) 열린 전국연합 제3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방자치제 선거에 대응하는 전국연합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민족민주세력의 반김·반민자당전선에의 결속을 위해서도 자신의 주도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민족민주세력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 임해서 정치적·조직적 권위와 힘을 길러내는 것이 이번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라고 하겠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994, 22호, 27-29).”

12) 1995년 지자체 선거 전국연합 산하단체 현황(전국연합 통신 61호 「'95 지자체 선거의 평가와 정세전망 보고」 참고)은 다음과 같다.

전국농민회총연맹: 55명 중 15명 당선(광역의원 4인, 기초의원 11명),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2명 중 1명 광역의회비례로 당선, 전교조: 10명 중 5명 당선(광역의원 2인, 기초의원 3인), 한청협: 18명 중 11명 당선(광역의원 3인, 기초의원 8인, 기초 1인은 전국연합후보와 중복됨).

국연합의 위상, 구성 원리, 집행구조를 비롯해 총체적인 조직발전 논의와 방향을 제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진행된다. 한편, 김영삼 정권의 출범으로 비롯된 부르주아적 개혁은 전국연합으로 하여금 대중투쟁보다 많은 정치적 대응력을 요구하게 했으며, 전국연합은 한계를 노출했다. 대선 패배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전국연합의 조직적 문제는 곧바로 전국연합의 조직적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유발한다.<sup>13)</sup>

정치적 국민운동체 즉,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한 논의들은 정치정세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정체, 침체, 후퇴를 강조한다. 전국연합이 물리력 중심의 투쟁에서 정치적 대응력을 중심으로 한 투쟁으로 변화되어야 했음에도 조직화된 정치적 구심의 부재 탓에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탄력적·목적의식적 대응 전략의 변화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교조적으로 적용되는 비합법전위정당노선과 합법정당노선의 극복,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정치조직의 목적의식적인 건설을 경시하면서 대중단체 연합체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려는 경향—민통련, 전민련, 전국연합으로 이어지는 전선조직 건설과정—을 경험주의적 편향이 관철되는 것으로 평

13)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출소한 김근태는 구두 주장을 통해 전국연합은 대중조직연합으로 위상을 재조정해야 하며 활동기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조직을 결성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김근태의 주장은 전국연합이라는 새로운 연합운동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된 점, 그 위상의 애매모호함,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적절한 논쟁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 주장은 정치조직의 위상이 애매모호함 때문에 전민련 재건론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연합의 구조적 한계와 혁신이 제기되면서 일정한 탄력을 받기도 한다. 1993년 1월 28일 국민회의 마지막 운영위원회(10차 운영위)에서 전국연합 강화, 발전과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국민운동체의 건설'을 통해 국민회의를 발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문(「향후의 정세전망과 국민회의의 방향」)을 제출했으나 즉각 결정하기에는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국민회의 해산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그 책임을 국민회의 전 집행위원들에게 부과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선전 재야 정치조직에서 → 정치적 국민운동체로 변화하게 되었다. 정치적 국민운동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연합 기관지 『연대와 전진』 1993년 2월호에 실린 양재원의 글(「전국연합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을 참고하라.

가하고 있다.

국가주의적 공포정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 대결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민중대회 등을 통해 정권에 대한 저항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정치활동을 중심에 두는 전선운동은 국가주의적 공포정치 하에서 효과적이다. 대중단체의 광범한 조직대중을 간헐적으로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대중단체 중심의 연합체’는 정권에 대한 강한 저항적 대결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국연합은 국가주의적 공포정치에 적합한 전선조직체계이다. 전국연합은 대중들의 정치적 공포감이 현저히 악화되는 방향으로 정치정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면 ‘과거에 적합한 조직’이다. …… 전국연합은 정치활동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계급, 계층 별 대중단체가 중심이 되는 연합조직으로는 이러한 정치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또한, 대중단체 중심의 전국연합체계는 제도정치(핵심은 선거)활동, 언론-여론정치활동, 공민운동 등에 필요한 국민적 권위가 있는 지도력 및 다양한 전문역량(선거역량, 언론전문역량, 정책전문역량)을 구비할 수 없었다(양재원 1993a).

새로운 정치조직건설론자들은 “전국연합이 반독재 민주화투쟁전선으로 보기에 매우 협소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몸이 무겁고 제도정치권의 개혁을 견인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국연합의 위상, 즉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있어서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치조직은 대중조직을 정치적으로 지원, 지도하는 업무를 자신의 것으로 하게 되며, 자신을 제도정치권으로 확대하며,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도정치권 내에 개혁세력과 양심적 보수세력을 포괄하는 정당을 건설해 내는 것(이목희 1993)”에 주안점을 두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세력의 압도적 부분이고 민족민주운동의 분열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적 국민운동체 건설의 경로와 관련 첫째, 국민운동체 건설을 주도할 추진 주체를 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적 국민운동체를 건설하는 방식, 둘째, 전국연합을 정치적 국민운동체 건설에 필요한 조직적,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체계로 재편하고, 이러한 개편에 기초한 활동 속에서 강화된 정치적·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적 국민운동체의 구축을 완료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초기에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논의는 후자에 기반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연합은 1993년 3월 21일 제2기 1차 중앙위에서 전국연합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 전반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재편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위 산하에 조직발전재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내부의 반발로 현재의 조건에서는 회원조직에서 조직발전재편논의를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전국연합의 지도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조직발전재편특위는 해체되었다. 전국연합 제3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사업 평가안을 통해 전국연합 강화론을 자신의 입장으로 재천명한다.

그간 끊임없이 운동내부에서 합법정당(또는 진보정당, 독자정당)의 건설을 주장하던 세력 이외에도, 새롭게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분화와 통일을 주창하며 그간 연합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던 세력 중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 전국연합 내외에 새로운 관심과 문제의식을 촉발시켰다. …… 전국연합 대다수의 견해는 좀 더 달랐다. 우선 대선 이후 일련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전국연합 그 자체의 안정화와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칫 새로운 조직대안의 모색이

전국연합 자체의 안정화와 강화에 심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전체 민족운동진영에 걸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되어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객관정세 역시 아직은 김영삼 정권의 본질과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김영삼 정권은 그 본질상 친미군사파쇼의 연장이며 민족민주운동을 둘러싼 전반 정세가 명확히 변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층 민족운동의 발전과정과 이에 대한 정권의 민중 배제적 정책의 일관은 대중조직을 기본 동력으로 형성하는 새로운 대치국면으로의 정치적 발전을 필연적으로 예고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측면에서는 민족민주운동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고 있던 전국연합 내부에서 이러한 정치조직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나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대중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 않았던 점 역시 주요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우선은 전국연합으로 포괄된 민족민주운동력의 발전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하에서 정세의 발전추이를 살피가면서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과 정치조직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설사 새롭게 조직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연합에 존재하는 운동력의 동의와 지지 속에 이러한 논의가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이상 「1994년 3월 전국연합 2기 사업평가 안」).

정치적 국민운동체가 수용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회주의 몰락, 문민정부의 등장과 개혁 드라이브, 절차적 민주주의 안정화 등 정치적 기회구조<sup>14)</sup> 변화에 대한 전국연합 다수파(NL)의 해석적 틀과 괴리가 컸기

14) 정치적 기회구조는 “사회운동의 형성을 위해 내적 자원의 이용을 촉발시키거나 제약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혹은 정치적 행위자에게 일정하게 주어지는 그러나 반드시 공식적이거나

때문이다. 정치적 국민운동체가 무산된 이유는 첫째, 전국연합 내부에서 김영삼 정권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조직과 전선운동과의 관계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 국민운동체의 건설이 연합운동의 약화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 셋째, 집권전략으로서 전민항쟁 노선이 NL 내부에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반대론자(통일전선 우위론)들은 지도집행력이 취약한 전국연합의 수준을 고려할 때 정치조직 건설이 자칫 정치적 실무집행역량의 이중화, 즉 실무집행역량의 비효율적 배치를 낳을 것이며 대중투쟁의 방기와 독자성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당시 좌파진영은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과 전국연합 강화론 양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김근태 중심의 민족해방우파의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 논의가 민중운동 좌파세력을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민중운동 우파와 자유주의 부르주아세력의 연합을 추구하는 분열주의이며 개량화·보수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민족해방과 주류의 ‘전국연합 강화론’ 또한 대중조직 재 전유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연합을 기층대중조직 활동가에게 이전시켜야 하며 민족해방 좌파와 민중민주 좌파의 정치적 통일로서 「민중운동 좌파연합」이 가장 우선적 과제이고, 이를 통한 진보대연합 실현을 주장한다. 한편,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을 통한 자유민주주의화, 이에 따른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명실상부한 은퇴와 진보 보수 구도로 정치구도의 전환과 민중대연합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이숙경 1994, 158-161). 정치조직 논의는 당시 사회운동이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과 조직적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

영속적인 혹은 전국적 규모일 필요가 없는 계기들(Tarrow 1996)로 인식된다. 정치적 기회 구조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내포된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원은 첫째, 제도화된 정치체제의 상대적 개방성 혹은 폐쇄성, 둘째, 정치체를 전형적으로 묶어주는 엘리트 계층의 광범위한 구성이 갖는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 셋째, 엘리트 동맹의 존재 여부, 넷째, 정부의 억압능력과 경향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조대엽 2000, 158).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상층명망가가 중심의 논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조직에 대한 불신만 확산하고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이로써 정치조직 논의를 통해 한국자본주의 성격과 김영삼 정권의 통치 방식에 대한 판단, 의회선거가 대중투쟁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사회 운동이 처한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나아가 정치조직의 상과 건설경로에 대한 부문에서는 오히려 후퇴 내지 담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조직의 건설과 대중운동의 계급적 단결과 계급정치로의 진전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될 수 없었다.

### 3) 정치세력화 논쟁 II: 현대적 국민정당 건설론

전국연합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조직 건설 논의는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전선재편’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제기되다가, 1995년 하반기부터 ‘전국연합 조직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발특위)’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전국연합이 출범할 당시에 투쟁의 구심이고 정치적 대표체임을 자위했던 위상이 근래에 와서 정체 내지 훼손되고 있다는 자기 진단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중략) 특위의 사업 내용은 ①전국연합과 민족민주운동의 상황과 진단작업, ②민족민주운동의 혁신운동, ③전선재편을 위한 구체안 마련과 실천방안 모색, ④정치조직 건설에 관한 제반 안 마련과 실천방안 모색, ⑤정치조직 건설에 관한 제반 안 마련과 실천방안 모색, ⑥통일운동의 발전방안 모색 등입니다. … (이창복 1995).

특히 조발특위가 「정치조직 건설안」을 내놓으면서 논쟁은 본격화된다. 이 안은 단순한 조직 진로 방침만이 아니라 운동의 전략적 방침을 둘러싼 대립이며,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다. 조직 내적으로 정치조직 건설에 대한 상당한 반대 의견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특위를 주도한 전국연합 지도부는 ‘정치조직의 성격, 그 건설경로와 시기문제’는 합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치조직 건설의 토대를 강화하자’는 수준에서 “특별결의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 당시 지도부는 “민족민주 단일정당론”에 기초한 전선재편의 상을 갖고 있었으며, 4·11총선 이후 정책위를 중심으로 현대적 국민정당론(진보적 개혁정당)<sup>15)</sup>을 제기했다.

전국연합 지도부는 1990년대 전선운동의 변화 양상(전선운동의 결합력 약화, 투쟁사안의 해소 또는 다양화)을 진단하면서 전환기에 처한 민족민주운동이 발전하고 집권하려면 구심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전국연합 지도부가 제기한 정치조직 필요성과 정치조직의 상은 아래와 같다.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발전 과제는 기본적으로 발전하는 대중운동의 역량을 폭넓게 재조직하여 전선운동을 확대, 재편하는 일과 함께 대중운동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정당차원의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족민주운동은 당장 집권역량을 가진 정당(통일전선적 당)을 건설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당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정치조직을 먼저 건설하고 정당 건설에 필요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축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치조직은 정당의 건설 이전까지 정당적 활동을 스스로 전개하면서 대중운동과 전선운동을 견인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필요한 정치조직은 ‘준 정당적 정치조직’이다. 이 중 정당적 정

15) ‘현대적 국민정당운동의 관점과 건설(전연 통신 69호)’이라는 글에 따르면 현대적 국민정당 건설의 경로는 ①1995년 8월 이후—현대적 국민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 공론화, 흐름 형성기, 기초준비, ②1996년 정당 건설을 전망으로 하는 정치조직 건설단계와 총선대책, ③1997년 대선, 1998년 지자체 선거와 정당건설 단계로 크게 나누고 있다.

치조직은 각 지역의 대중활동가 역량과 노동자, 농민운동 내부의 선진 정치역량, 청년활동 역량, 각계각층의 전문역량 등으로 구성되며, 이후 건설될 대중정당의 골간 정치역량으로 될 활동가 중심조직이다(최규엽 1996).

정치조직의 건설 방도와 경로, 주체와 성격, 전제 등의 문제에 대한 합의의 그룹도 늘어갔다. 그 결과 1996년 대의원대회에서 정치조직 토대 마련을 결의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전국연합에서는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치조직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서 간부에 대한 정치 연수까지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조직 건설은 현실적 힘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당시 특위의 설문조사에서는 당장의 정치조직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며, 전선운동을 내용적·조직적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sup>16)</sup> 현상적인 반대 이유는 “그간 정치조직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폐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으며, 통일운동에서 배태된 분열과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지역운동의 발전은 아직 미숙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sup>17)</sup>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판의

16) 당시 제15차 중앙집행위에서 안건 상정을 놓고 치열한 대립이 있었으며, 안건 상정 반대자는 서울연합, 한총련, 전국노련 등이었다. 한편 2월 25일 열린 대의원대회(전국노련은 정권 상태)에서는 서울연합, 한총련, 한청협 일부가 반대의견 제기하며 논쟁이 가열되었으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하여 가결되었다(총 378명 중 찬성 252, 반대 123, 무효 2).

17) 1997년 전국연합 동계일꾼 수련회에서 보고된 자료집에 의하면, 지역 순회 간담회 결과는 정치조직에 대한 중앙과 지역연합의 고민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으로는 정치조직 추진의 문제의식이 주로 지역 연합 간부차원으로 한정되고 전반적 운동의 침체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정치조직 추진의 취지와 의의에는 동감하나 경로와 일정 등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즉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역과 부분의 실정과 처지에 따라 수순과 당면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집중점에서 편차가 발생한다. 셋째, 정치조직의 추진형식이 형식적으로 혹은 상층의 판짜기 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즉 중앙에서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떠한 전제조건(지역운동

핵심은 첫째, 한국사회 성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둘째, 반미-반김영삼, 대중투쟁에 대한 인식 차이, 셋째, 전선과 당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고).

전국연합 지도부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자신의 독자적 세력화에 기

〈표 4〉 정치조직과 갈등적 담론

담론	정치조직 건설론	정치조직 시기상조론 (내지 불필요론)	담론
긴급성 (urgency)	전국연합의 왜소화(정치적 대표체 위상 불분명), 대중운동의 성장과 사회정치세력의 분화, 선거투쟁의 의미 증대	- 평화적 이행을 위한 체제 내적 개혁주의 - 민중운동의 시민운동화	위험론 (jeopardy)
행동성 (agency)	- 좌경적 편향(전민항쟁) 우경적 편향(수평적 정권교체론) 극복 - 준정당적 정치조직 건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단일 정당) → 현대적 국민정당 건설 → 대선시기 독자후보 운동추진	- 반미·반김 투쟁의 악화 - 전민항쟁, 통일전선 노선을 부정하는 개량주의	무용론 (futility)
성공가능성 (possibility)	- 독자적 세력화에 근거한 민주연합 → 평화적 이행 (선거를 통합 집권) → 다당제를 통한 지속적 변혁추구	-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 교체의 실패	역효과론 (perversity)

\* 출처: 이창언(2011)

과 계급계층 대중조직의 토대강화)을 확보하거나 운동의 혁신과정을 거치지 않고 몰아가기 식으로 정치조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 넷째, 중앙의 논의가 기층과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정치조직을 주창하는 인적 구성에서 제한성이 존재하므로 인적 구성요소를 보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계급적 지향과 일련의 분파문제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초한 민주연합 → 평화적 이행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중정당 건설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조건과 대중운동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노선의 재정립 문제라는 것이다.<sup>18)</sup> 그것은 첫째, 사회정치적 세력이 매우 다양하게 형성·분화되었다는 시각에 기초한다.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도 민주대연합이라는 틀로 묶어낼 수 없다. 둘째, 대중운동의 발전적 전개로서 1987년 이후 점차 운동의 다변화가 일어났다. 셋째, 군부의 퇴조, 가두투쟁보다 선거의 중요성, 제도정치공간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평화적 이행에 더 무게를 싣고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기반을 둔 민주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전국연합의 조직역량 왜소화 현상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전국연합은 초기 민족민주운동이 단결할 수 있는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라고 자임했지만, 3한(한총련, 한청협, 한노협)의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노·농·빈·교·청·학 등 전국 규모 6대 부문 조직의 연합체로 출발한 전국연합은 부문 조직들의 결합도가 약화되고, 민주노총, 여성, 환경 등 새로운 주요 대중운동이 연합의 바깥에서 출범, 성장하게 되면서 대중적인 전선운동(체)로서의 위상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1987년 대선에서의 비판적 지지와 1992년 대선의 범민주단일후보 방침,<sup>19)</sup> 대선 이후 새정조 논의과

18) 현재적 국민정당 건설에 대한 초기의 문제의식은 이승환(1995, 32-26)을 보라.

19) 1992년 대선과정에서의 후보전술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내부에서 심각한 양상을 띠기도 했다. 대선투쟁 전술과 관련된 논쟁은 크게 민주연합론과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민독정)론으로 대별되었다. 민주연합론 내부에는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론’과 ‘범민주단일후보론’이 대립했는데 전대협의 공식 방침은 후자였다. 두 개의 흐름을 특정 조직으로 환원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당야론’은 민족해방파 중 새벽(석탑)계열, 청년학생단위에서는 자민통 그룹이 논의를 주도했다. 한총련 초기에는 소위 새벽계열이 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차츰 정통자주계열로 영향력이 이전되어갔다.

정을 거치면서 주요 활동가와 명망가의 이탈도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부문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부문대중조직의 자생력과 독자성이 강화되고 민족정향적—동일성과 집단성을 강조한—동원의 정치는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간극을 줄일 수 없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전국연합 내부의 현실에 대한 완곡한 형태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첫째, 전국연합 출범초기에 연합의 중심 동력을 이루고 전선운동의 발전을 담보했던 주요 대중단체들과 연합과의 결합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90년대 들어 전국연합 바깥에서 다양한 대중운동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전국연합만으로 이처럼 다양화되고 발전하는 대중운동을 민족민주운동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데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중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정치적으로 안내하면서 이에 기초해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중앙정치적 역할에 있어 전국연합은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대중운동의 상태(각계 각층의 대중의 권리의식과 요구의 증대 속에서 다양한 계급계층적 대중운동으로의 급속히 성장, 발전)를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으로 안내해야 할 민족민주운동의 중앙정치적 역할의 정체, 활동가들의 집중과 통일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최규업 1996).

3한과 전교조 일부 상층 역량의 결합과 NL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운영되었던 전국연합(지역연합)은 점차 특정한 정파조직으로 인식되면서 그 위상도 하락하게 된다. 회비 연체, 전국연합 지역조직(지역연합)의 정체에 더해 정치조직을 둘러싼 논쟁과 자주통일운동을 둘러싼 내부 분열과 갈등이 연거푸 거듭되면서 전국연합에 속한 NL 내부의 결속력도 급속히 약화된다.

#### 4) 정치세력화 논쟁 III: 독자후보 전술

1996년 당시 민족민주운동진영에서 논의되는 대선전술은 개혁연합론(민주당 등), 민주연합 역할론(국민회의와 통일시대 국민회의 등), 민족민주후보론, 불개입론 등이 있었다(김성희 1996, 35). 전국연합 내부에는 크게 국민회의 지지론, 대선불개입론, 독자후보론으로 입장이 나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회의 지지론은 현실적인 제1야당인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부류에는 황태연의 저항적 지역대연합론 또는 지역계층연합론도 있으며, 김근태의 통일시대국민회의에서 주장하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실현과 민주세력의 승리를 위한 민주연합론도 있다. 또한 정책연합론까지를 포괄하는 노선으로 볼 수 있다. 이 견해는 지역연합에 의한 지역 간 정권교체, 권력분점 방법으로써 거국연립내각론, 권력구조 문제의 협상카드화, 색깔론 방어와 새로운 보수이미지론, 지역연합에 의한 알파론 등 집권을 찾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하고 있다.<sup>20)</sup>

대선 불개입론은 1992년 대선과 달리 민족민주진영이 개입할 근거가 없고, 1992년 정책연합이 민주진영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과 함께 대선보다는 지자체를 통한 민주세력이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민족민주진영의 대선방침이 분열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극적 대처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김두수 1996, 55-56).

독자후보론은 정치권의 제3후보론(3김이 아닌 비지역주의적 개혁후보)과 다르게 민족민주진영의 독자후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

20) 민주연합론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자민련과 연합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제기하는 연합론부터 김영삼의 개혁세력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연합론까지 다양하다. 민주연합의 범위는 물론이거니와 주도할 세력, 형식, 지분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주연합론은 민족민주세력이 대선에서 패배가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한 도덕성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고민을 제기했다.

DJP연합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면서 민족민주운동의 장기적 발전과 정치 세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국연합에서 대선방침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96년 11월부터였다. 물론 이전에는 한총련 사태 수습, 노개위에서의 노동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웠다. 대선 방침은 주로 ‘전국연합 통신’과 월간지 『말』을 통해 소개되었다. 범민련을 지지하는 전국연합 내부의 흐름과 한총련 주류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며 그 형태가 다소 완화됐을 뿐 본질은 여전히 그러하다. 따라서 민주대 반민주 전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997년 대선에서 독자후보전술이 아닌 반(反)신한국당 노선을 견지하게 된다. 대선방침을 둘러싼 갈등은 통일운동 논쟁에 이어 학생운동을 포함한 민족해방 계열 전체에 정치조직을 둘러싼 갈등과 분화를 촉진시킨다(이창언 2008: 2010 재인용).

1997년 2월 22일 전국연합 제6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힘을 결집시켜 민주개혁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고자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이어 1997년 6월 14일 전국연합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우리’ 후보 방침을 결정했다.<sup>21)</sup> 그러나 전국연합의 또 다른 자주계열은 민주대연합에 입각한 대선 방침을 고수(한총련 주류, 범민련 노선을 지지하는 지역연합, 전선강화론의 입장에 선 자주파), 전국연합 방침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비지론으로 선회하게 된다. 1997년 11월 23일 다시 개최된 제6기 2차 대의원대회에서 “지난 6월 14일 임시대의원 대회

21)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연합은 ‘反신한국당, 민주개혁’의 기치 아래 폭넓게 민주연합을 구축하고 이를 대표하는 ‘우리 후보’를 추진하되 ‘우리 후보’는 ‘국민 후보’를 지향해야 한다. 전국연합은 민주노총 등 민족민주진영의 힘을 결집하여 우리 후보를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함께 광범위한 민주세력을 결집하는 활동을 힘있게 벌여가야 한다. 민족민주진영은 공동의 선거기구(가칭 민주개혁국민연합)를 제안하고 여기에 민주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후보’를 추대한다.”

에서 결정한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주적 정권교체’의 대선 방침 가운데 민주적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이 국민승리21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민승리21 후보가 ‘민주적 정권교체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국민승리21의 주요 축이었던 전국연합의 많은 조직들도 사실상 DJ를 지지하며 대선에 임하게 된다.

국민승리21에 잔류한 전국연합 계열과 국민승리21 외부 즉, 전국연합을 넘어서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아래로부터 실현하려는 일련의 흐름들이 1998년 이후 진보정당운동에 적극 참여하지만 의미 있는 선거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 5) ‘9월 테제’와 전국연합의 해소

한국사회는 6월항쟁 이후 20여 년 동안 변화가 많았다.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국민대중의 민주민권의식은 성장했고, 자주와 평화 의지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군부권위주의는 후퇴했고, 민주화운동과 가까웠던 세력이 집권하기도 했다. 대중의 요구는 민주화운동으로 단순 환원되지 않는 환경, 여성, 교통, 복지, 인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민주화 이후 공적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갈등전선’이 형성되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고 생산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기본적인기는 하지만,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생산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인간행위와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국연합은 민족·국가 정향적 운동, 차이를 인정하는 운동이 아닌 동일성과 집단성의 원리에 기초한 대중운동 방식을 고수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은 미시적 권리의 강한 의식을 가지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으며, 개인의 자율과 이니셔티브를 극대화하기 원하는 의지가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가중심, 인간중심, 남성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환경보호,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이는 갈등 지형, 개인적 욕구, 집단적 행동 지형이 과거와 판이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상에도 불구하고 전국연합은 출범 이후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조용하며 자기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이창언 2007, 89).

1987년 이후 대중운동의 성장이 획기적이었음에도 일상적 삶의 공간에 튼튼히 뿌리 내리는 데 실패했다는 반성이 제기된다. 이후 줄곧 대중적 기반과 대중적 지도·집행력의 취약이라는 주제적 한계와 더불어 소련과 동구권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김영삼 정권의 등장 이후 변화된 통치방식,<sup>22)</sup> 다양화된 계급분화현상, 성장한 국민의 권리의식에 조용하면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각성이 전국연합 안팎에서 분출되었다. 전국연합은 내외의 이러한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 안고 시민의 생활 속에 깊이 결합하여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지역운동 등 다종다양한 운동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결집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양과 폭, 내용을 확대해 나가야 했다. 이는 연합전선 조직의 체제정비와 다양한 대중운동체의 건설, 시민운동과의 연대, 정치조직 또는 진보정당의 건설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심화되어야 했다.

하지만 1992년 대선 이후 전국연합 내부에서는 정치 조직 혹은 진보정당에 대한 상과 건설경로, 선거방침을 둘러싼 그 어떤 혁신안도 수용하지 못했다. 단적으로 1997년 대선시기 국민승리21에 대한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방침의 변화는 민주 반민주 대립구도라는 낡은 시각만을 확인해 주었다. 전국연합의 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제언은 출범 이후 줄곧 제

---

22) 김영삼 정권은 집권 초기 문민정부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골적인 폭력과 강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공세 속에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위에서 통치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기되어 왔지만, 전국연합 내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저열성과 거부는 이후 전국연합이 분열하고 특정 정파의 조직으로 과잉 인식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 과거 연합체적 조직은 지역과 부문의 불균등 발전 속에서도 전국적인 사안(반독재민주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투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좋은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연합전선체적 조직이 수권을 담당할 수는 없었다. 이미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과정을 거치며 과거 저항전선이 “비정상성에 대한 도전(일반민주주의 부재)에서 정상성에 대한 도전(차이의 정치, 민주주의의 심화와 급진화)으로 변화(조희연 2004)”하는 상황에서 전국연합은 전민항쟁 노선에 근거한 대중단체연합의 전략적인 전선체로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담당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중적 민주화에 대한 자기전망의 부재(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재구조화에 대한 자기전망) 속에서 전국연합은 운동의 구심체, 특히 정치적 대표체로서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정치조직, 진보정당에 대한 고민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 낡은 운동이념 고수, 지역운동에 대한 경험 부재,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국연합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하에서 위력 있는 운동체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운동의 총량은 늘었으나, 위력은 줄어든 상황에 도달해서야 전선 강화론을 펼쳤던 전국연합의 활동가들도 이후 민주노동당에 합류하게 된다(이창언 2007, 85-89).

주지하다시피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가 열렸던 2001년 9월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결의된 ‘9월 테제’ 이후 전국연합 내 민족해방파는 대거 민주노동당에 입당한다.<sup>23)</sup> 이는 사회조건과 운동변화를 거스

---

23) 전국연합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 강화 △전국민중연대에 힘을 집중해 ‘명실상부한 민중진영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강화 △조국통일과 반미반전투쟁을 위한 통일연대 강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의한다.

를 수 없는 전국연합 내 자주파의 현실적(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월테제로 불리는 이 결의 내용은 진보정당을 독자적이고 합법적인 정당이 아닌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하위구조로서 의회투쟁의 전선기구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전선강화론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국연합은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로 발전적으로 해소되었고, 민족해방계열은 통일전선(진보연대)과 전술적 통전당(민노당)이라는 체계를 구축한다.

#### 4. 마치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초기 전국연합이 다양한 정파와 대중조직(지역-부분)의 긴장과 갈등을 아우르는 공간이었지만, 점차 NL의 정파조직으로 귀결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전국연합 내부의 다수적 흐름은 반제를 지향하는 한편, 한국사회에서 운동은 비타협적 대중정치투쟁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기본이고, 합법정치전술은 그 전술적 측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최소한 민주적 개방이 더욱 확장되는 2000년 전까지는 비타협적 대중정치투쟁을 수행할 만한 역량과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 활동은 선거방식에 의한 정권장악이라는 환상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개량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연합을 하나의 단일대오라고 환원할 수 없음을 전국연합 내부의 정치조직과 통일운동, 주요한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본과 민통련, 전민련으로 이어지는 연합운동 조직은 정치적으로 폐쇄적인 사회에서 대단히 유용했고 일정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 민중들의 정치활동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던 유

신, 5공의 철권적 파쇼체제하에서 상호 지원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전체 역량 자체가 작아 전체 역량의 동원 자체가 용이한 상황에서 투쟁 역량을 간헐적으로 동원하는데 적절한 조직체계는 연합체였다. 따라서 연합조직은 당시 민족민주운동의 주요 실천 양식에 적합한 조직이었다. 때문에 공개적 연합조직은 각종 투쟁을 활성화시키면서 민족민주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점차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1980년대 운동 이후 등장한 급진적 운동노선인 NL과 PD(CA)의 결합과정에서 계급과 당중심성, 독자적 정치세력화보다 야당과의 연대를 강조한 통일전선론이 우위를 점해왔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형성된 주변부적 멘탈리티와 무계급적 비생산주체로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졌던 학생과 지식인들의 특성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제통일전선론은 학교 교육을 통해 내면화된 민족적 에토스를 간직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쉽게 접합될 수 있었다. 분단체제의 “과잉 민족주의적 상황은 한국의 타락한 보수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의 민족주의적 현상에 우호적인 태도를 창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민주주의 차원의 정치적 실천의 제시와 함께 이들이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들의 단합,’ 민족통일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로의 귀속감, 타 공동체가 갖지 못하는 문화적 예외주의를 형성함으로써 과거의 고통과 저항의 집단적 기억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계급노선과 달리 반제노선은 현실적인 개량투쟁노선과 민주대연합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화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민주화라는 기본 틀과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반제통일전선론(엄밀히 말하면 야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민주대연합 노선)의 선택은 가능한 행동노선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과 비용, 주체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주변부민족해방이념의 수용은 정통성(민족주의/정통이념)이라는 기표 투쟁을 통해 민족의 적 및 운동 내부의 적(타 정파)과 헤게모니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고, 군중노선과 민주대연합은 일정한 시기 운동 대중화에 효과적이었다.

‘통일전선론’은 민주화운동의 연대와 협력 폭을 넓히면서 1987년 시 민항쟁의 성공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운동의 독자성을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1980년대 중후 반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민족해방계열의 주류는 최소한 일관되게 합법 정당 건설과 관련해서 유보적 태도를 보이거나 합법정당의 필요성을 인 정하는 경우에도 전선운동의 보조조직으로 바라보았다. 반미구국통전론 은 사실상 합법정당 건설을 부차적인 과제로 만들었다. 동시에 남한의 독자적인 전위당 건설노선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sup>24)</sup>

통일전선론의 확산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등과 같은 변혁의 동력과 대상, 전략과 전술을 둘러싸고 “친북적인 NL진영과 북한에 비판적인 PD진영 간 남남갈등을 전면화”하기도 했다. “냉전적 국 가 대 진보적 시민사회의 대립이라는 과거의 갈등 틀 외에도 진보적 시민 사회 대 진보적 시민사회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남남갈등(손호철 2006, 34-35)”이 형성되기도 한 것이다. 이는 반미구국통전이 제국주의 절대 규정론, 원초론적 민족이론에 근거한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태도, 광범위한 역량편성, 남한의 자주적인 당 조직 건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

24) 일부 민족해방계열(주사파)이 ‘당 중심성’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외세 지배하에서 당적 조직이 갖는 제약과 한계(탄압과 개량화)라는 측면보다는 이미 당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고 에 기인한다. 인용문은 일부 민족해방계열(주사파)의 정치세력화의 지체문제를 내부 노선 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당과 통일전선에 관한 주체주의자들의 기여는 첫째,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의식의 광범한 유포와 당에 관한 문제의식의 약화, 둘째로는 노동계급의 독자성의 상실과 통일전선 내 계 세력의 평준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기여는 앞서 언급한 바의 계급이기주 의 비판과 “한반도 전체로서 보면 노동계급의 당은 존재한다. 일국일당주의의 원칙에 비추 어 보면 또 하나의 당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라는 심오한 명제의 소산이 다. 따라서 현 단계 남한에서 필요한 (전위)조직은 당이 아니라 통일전선이라 한다. 나아가 주체주의자들은 그러한 전위조직으로서의 통일전선 역시도 한민전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소리(필자 주: 구국의 소리방송)는 전위조직의 지도가 행해지는 매개이며, 이 소리를 중심으로 단결된 행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기여는 독자적인 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필자 미상, 주체시대의 종말 맑스-레닌주의의 비판, 1988/03).

일반민주주의에 한정된 실천에 집중(이창언 2009)하는 예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대연합 노선은 민주화 이후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인 저항과 적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운동 기반이 내파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족해방계열의 주요 명망가들의 보수정치권으로의 선택적 포섭과 국가와 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제한적 투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통전론의 현실태로서 민주대연합론과 그 실천은 기존의 권력화된 지배가치의 대립과 초극, 기존의 제도화된 실천방식과의 차별적 초월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이념의 근본성과 공유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민주화’라는 기본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전선론의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과 함께 민주화 이후 초대받은 정치, 민주대연합론이 지속되고 있는 지를 유추할 수 있다(이창언 2009; 2011).

## 참고문헌

- 경기남부총련. 1993. “경기남부총련 대의원 대회 자료집.”  
『경향신문』. 2003. “갈림길에 선 (중) 배타적 지지단체들, 민노총도 균열.”  
2008/02/13.  
국민승리 21 준비위. 1997. 『국민후보 추대와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김동춘.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 당대.  
김두수. 1996. “민주진보진영의 총 단결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서자.” 《전국 연합통신》 112. 1996/12/23.  
김문수. 1991.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사회와 사상』 26.

- 김성희. 1996. “97년 정세와 대통령 선거쟁점.” 《전국연합통신》 112. 1996/12/23.
- 김창우. 1992. 『민주대연합과 통일전선운동』. 두리.
- 김태호. 1990.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조국.
- 류근일·홍진표. 2005. 『지성과 반지성』. 기파랑.
- 문영호. 1989. 『반제반파쇼운동론: 개량적 변혁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온누리.
- 민정구 편. 1987. 『통일전선론』. 백산서당.
- 민족통일민주주의 노동자동맹, 1989. “현 시기 우리의 전략적 과제와 조직상  
    과업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7. 『말』 합본호 1, 2.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992. 『연대와 전진』 9.  
\_\_\_\_\_. 1993~1997. 《전국연합통신》.  
\_\_\_\_\_. 2001.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 자료집』.  
\_\_\_\_\_. 200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서.”
- 박태균. 1993.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창작과 비평사.
- 반미청년회. 1988. “조직·조직운동에 대한 약간의 고찰.” 『자주언론 혁신』 6.
- 반제청년동맹. 1989. “〈새 세대〉 편집·배포에 참여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주체기치』 4. 1989/12/04.  
\_\_\_\_\_. 1989. 『주체기치』 2. 1989/07/29.
- 백기현. 1988. “통합으로 달리는 재야운동권.” 『신동아』.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2007. 『한국 노동정치/진보정당운동 자료집(1985-  
    2004): MAP/조직해설』.
-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2000.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구조』.
- 양난주. 1994.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해서도 자주적이어야 한다.” 『사회평론  
    길』 9월호.
- 양재원. 1993. “전국연합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연대와 전진』 2월호.  
\_\_\_\_\_. 1993a. “현정세의 특징과 민족민주진영의 조직적 과제: 정치적 국민

- 운동체 건설의 절박성을 중심으로.” 『정세연구』 3월호(통권 43).
- 오동렬. 1993. “인터뷰: 문익환 목사의 범민련 해소선언.” 『사회평론 길』 10월호.
- 오세철. 1991. “계급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사회평론』 9월호.
- 윤상철. 199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 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재걸. 1985. “재야민주, 민중운동단체들.” 『신동아』 8월호.
- 은수미. 2004. “전선운동, 저항담론, 그리고 사회관계.”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 이 연. 1989. “조국통일운동과 변혁운동.” 『녹두서평』 2. 녹두.
- 이광일. 2007.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건설과 해소.”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 한울.
- 이목희. 1993. “현 정세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조직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세연구』 3월호(통권 43호).
- 이숙경. 1994. “‘맑스주의의 진화’ 논의와 노동의 중심성.” 『진보』 8. 민맥.
- 이승완. 1995.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전국연합통신』 76.
- 이정희. 1997. 『재야 정치집단의 민주화운동』. 한국정치학회.
- 이주현. 1991. 『한국 전위조직운동사』. 동해.
- 이창복. 2005. “조직발전을 위한 토론이 시급하다.” 『전국연합통신』 69.
- 이창언. 2007.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을 기억하며.” 『12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수원사랑민주청년회 동우회.
- \_\_\_\_\_. 2008. “한국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1980년대 급진이념의 형성과 분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_\_\_\_\_. 2011. “민족해방(NI)노선의 확산과 진보정치운동의 지체.”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 한울아카데미.
- 일송정 편집부 편. 1990.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 장기표. 1989. “나는 왜 합법정당 결성에 나서는가?” 『사회와 사상』 11월호.
- 장기표 서면인터뷰. 1990. 『사상문예운동』 여름호.

- 장명국. 1992. “대선시기 민족민주운동의 과제.” 《정세연구》 35.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988.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과정과 전망.” 『내 사랑 한반도여 민주노조 물결쳐라』. 사계절.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89. 「제2차 정기중앙위원회자료집」.
- 田富久治. 1987. “현대의 통일전선과 선진국혁명.” 민정구 엮음. 『통일전선론』. 백산.
- 정해구. 1988. “통일전선에 대하여.”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쟁점』. 세계.
- \_\_\_\_\_.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재야운동: 재야의 형성, 분화와 민주적 실천.” 『2001년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 조대엽. 2000.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
- \_\_\_\_\_. 2007.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미주의의 분화와 대중화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1-4.
- 조현연. 2009.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 정파·제도·리더십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0.
- 조희연. 1990.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 \_\_\_\_\_.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 \_\_\_\_\_.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 \_\_\_\_\_. 2004. “저항담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함께읽는책.
- 채만수·김장환 편. 1990.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 현 단계 통일전선운동의 쟁점과 그 전망』. 죽산.
- 최규엽. 1996. “민족민주운동의 현황과 조직적 진로.” 《전국연합통신》 86 (1996/01/23).
- 통일여명 편집국. 2001.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한호석 소장 논문집』.
- 필자 미상. 1988. “주체시대의 종말 맑스레닌주의의 비판.” 1988/03.
- 하상복. 2005.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 1945-1987.” 『동아연구』 49.
- 한국민족민주전선. “자주, 민주, 통일의 여명을 알리는 주체의 전파.” 《구국

의 소리 20주년 기념방송》.  
한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반. 1991. 『한국현대사 4』. 풀빛.

투고: 2011.4.4    심사: 2011.5.2    확정: 2011.5.16